

# 백신 확보 직접 나선 文대통령...국민 불안 불식 노력

### 文대통령, 모더나CEO와 통화...추가 공급 합의 백신수급 문제 없다는 메시지 직접 발신위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다국적 제약사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통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선 것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물량 확보를 비롯해 접종 시기까지 주변 아시아국가와도 비교 열세에 놓였다는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미국 기반의 다국적 제약사 모더나의 스테파네 반셀 CEO와 화상 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분(2회 접종·총 2000만 도즈)을 추가 공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셀 CEO와의 27분간 통화에서 기존 모더나가 한국과 협의 중이었던 1000만명분(2회 접종·총 2000 도즈) 백신 공급 외에 1000만명분(총 2000 도즈)을 추가 공급기로 구두 합의했다. 아울러 당초 내년 3분기 공급 예정이었던 협의 물량(1000만명분)과 이번 통화로 추가 확보한 1000만명분을 더해 총 2000만명분을 2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통화를 통해 모더나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사이의 백신 보호물질의 임상 시험 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기업의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이 거두고 있는 성공과 긴급사용승인을 축하하며,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반셀 CEO는 “조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 연내에도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토록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은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바탕으로 한 기존 K-방역의 앞선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예방과 면역 단계의 최우선 진입 목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선 선진국 방식도 병행 가능하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수보회의 공개 발언으로 ‘백신 실기론’에 처음 대응했던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를 시도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당초의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백신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흔히 신속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로 이어지는 3T를 꼽는다. K-방역의 3T(Test·Trace·Treat)는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국내 방역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백신 접종 중심의 방역 정책보다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우선 꺾는 방역 정책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



향성이 공감을 얻지 못하자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백신 추가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게 된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글로벌 기업 CEO와 화상 통화를 했고,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브리핑을 직접하게 됐다)”이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4차 특사’ 민생에 방점...한명숙·이석기 논의도 안했다

### 文정부, 정봉주·이광재·곽노현 등 앞서 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은 일체 배제돼 정부의 판단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의 위중 교사의혹 등이 제기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나, 정부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 한다. 정부는 2021년 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3000명 이상이 사면 혜택을 입게 됐으나, 유명 정치인들의 이름은 없었

다. 특히 한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아쉬움을 삼켰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첫 특별사면 당시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복권했고, 지난해 세 번째 특별사면 때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을 사면·복권했다.

반면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은 정부의 사면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이름이 언급됐으나, 네 차례 특별사면에서 매번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지만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북한의 대남 핵명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15년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현재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중 교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올해 제기됐는데, 해당 사안이 사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혹 제기 당시 여론에서는 공공연하게 재심이나 재수사 주장까지 나왔고, 당시 수사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사범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사면이 정쟁에 활용될 소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던 셈이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 국민의힘 “대북전단 금지법

### 국제 망신...개정안 제출 예정”

### “국민 기본권 회복 할 것”

국민의힘이 2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당 의통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독소조항을 전부 들어내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연일 국제 인권단체, 미국·영국 의회와 서방 민주국가 등에서 ‘김여정 하명법’ 비판이 쏟아진다”며 “대한민국이 쌓아온

인권 선진국 이미지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 게재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공포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행위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범안 공포 전부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탈북민단체 등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법이) 공포되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불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